

발 표 1.

협동조합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문 보 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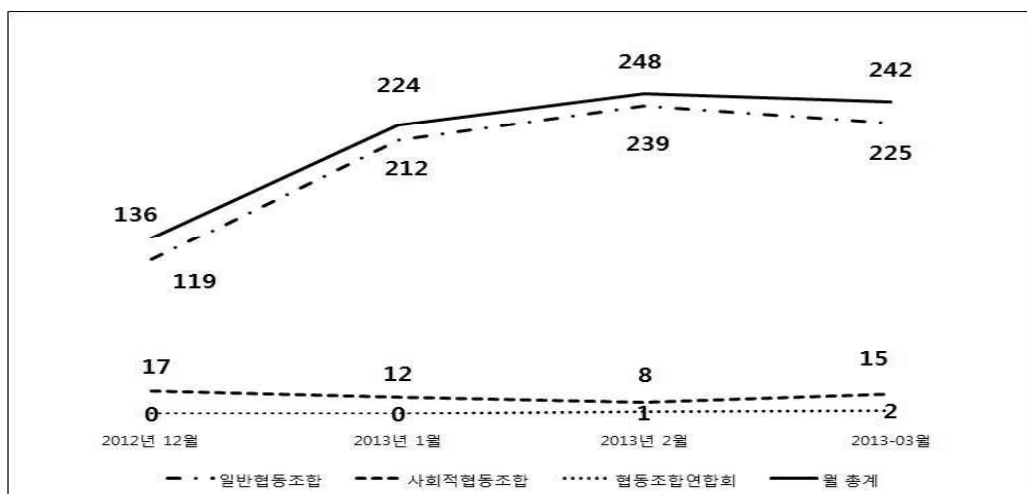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 최근 협동조합 설립 현황²⁾

1) 전체 협동조합 신청 및 설립 현황 : 일반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빠른 성장세

- 법 시행이 후 협동조합을 신청하는 건수는 1일 7개에 달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협동조합 월별 신청 추이 >



- 3월 말 기준으로, 일반협동조합 673건과 사회적협동조합 14건으로 총 689건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개의 일반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다.

1) 5월 7일 '협동조합활성화 포럼'의 발표문을 재인용하였음을 밝힌다.

2) 3월 31일자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설립 인가신청 및 설립 신고 현황' 자료와 기획재정부 내부 자료를 재구성했음을 밝힌다.

□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은 일반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있다.

※ 설립 및 인가신청을 한 협동조합에서 일반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93.5%인데, 설립 된 일반협동조합은 97.7%이다.

<표 1. 협동조합 월별 신청 및 인가·수리 건수>

	'12년 12월		'13년 1월		20'13년 2월		'13년 3월		누적(3월말)	
	신청	수리	신청	수리	신청	수리	신청	수리	신청	수리
일반협동조합	115	—	216	221	239	216	225	236	795	673
사회적협동조합	13	—	16	4	8	3	15	7	52	14
협동조합연합회	0	—	1	—	0	—	2	2	3	2
월 총계	128	—	233	225	247	219	242	245	850	689
1일 평균 신청	4.5		7.5		8.9		7.8		7.1	

2) 유형별 협동조합 설립 현황

(1)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사업형을 골간으로 한 목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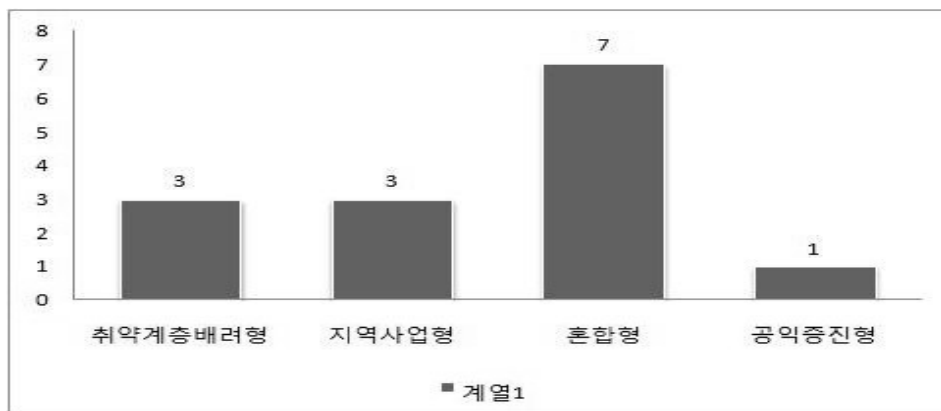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크게 취약계층배려형, 지역사업형, 공익증진형, 공공위탁형, 혼합형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4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면, 지역사업형 3개, 공익증진형 1개, 혼합형 7개, 취약계층배려형 3개로 혼합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연번	사회적협동조합명	주요사업	소관부처	유형
1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급식, 교육연구 사업	기재부	지역사업형
2	글로벌시민양성 사회적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재부	기타 공익증진형
3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기재부	지역사업형
4	보령석공예생활용품 사회적협동조합	석공예용품 생산	기재부	혼합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배려형)
5	서경 사회적협동조합	화장실 관리사업	기재부	취약계층배려형
6	버팀목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저소득층 교육, 성폭력 예방 사업	교육부	혼합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배려형)
7	도시원에 사회적협동조합	원예교육서비스업	교육부	혼합형(지역사업형, 취약계층배려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8	수정동화망미율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	도시형 수직농장운영	농림부	지역사업형
9	파주녹색농업 사회적협동조합	로컬푸드 개발 연구보급, 위탁사업	농림부	혼합형(지역사업형, 취약계층배려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10	한국웰니스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개발 컨설팅	농림부	혼합형(지역사업형, 취약계층배려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11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등	농림부	혼합형(지역사업형, 공익증진형)
12	성북구의류리폼 사회적협동조합	의류리폼	환경부	혼합형(지역사업형, 위탁사업형)
13	카페오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고용부	취약 계층배려형
14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취업지원(세차)	고용부	취약계층배려형

<그림 2.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분포>



- 혼합형의 경우 경제활성화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사업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혼합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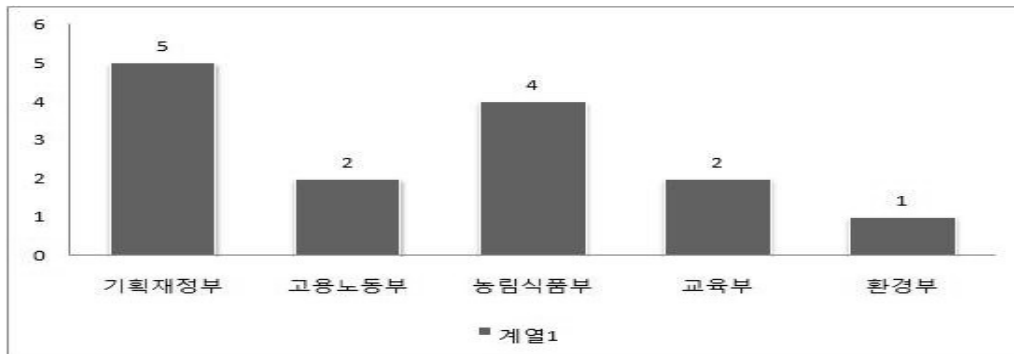
	사회적협동조합명	취약층배려	지역사업	공익증진	위탁
1	보령석공예생활용품 사회적협동조합	◎	◎		
2	버팀목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	◎		
3	도시원에 사회적협동조합	◎	◎	◎	◎
4	괴주녹색농업 사회적협동조합	◎	◎	◎	◎
5	한국웰니스 사회적협동조합	◎	◎	◎	◎
6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	◎	
7	성북구의류리폼 사회적협동조합		◎		◎

-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을 받은 중앙부처는 9개이며, 이중 5개 부처에서만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특히 사업 내용 상 교육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이 많은데, 인가율은 14.3%에 머물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66%의 높은 인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4. 중앙부처별 사회적기업 인가신청 현황>

연번	소관부처	신청건수비고 (2.28일 기준)	신청건수누계 (3.31일 기준)	인가건수누계 (3.31일 기준)
1	기획재정부	6	11	5
2	교육부	10	14	2
3	문화체육관광부	2	2	—
4	농림축산식품부	5	6	4
5	보건복지부	4	6	—
6	환경부	1	2	1
7	고용노동부	5	6	2
8	여성가족부	1	1	—
9	중소기업청	3	4	—
총 계		37	52	14

<그림 3. 소관부처별 인가 현황>



(2) 일반협동조합 : 서울시와 광주시가 양적 성장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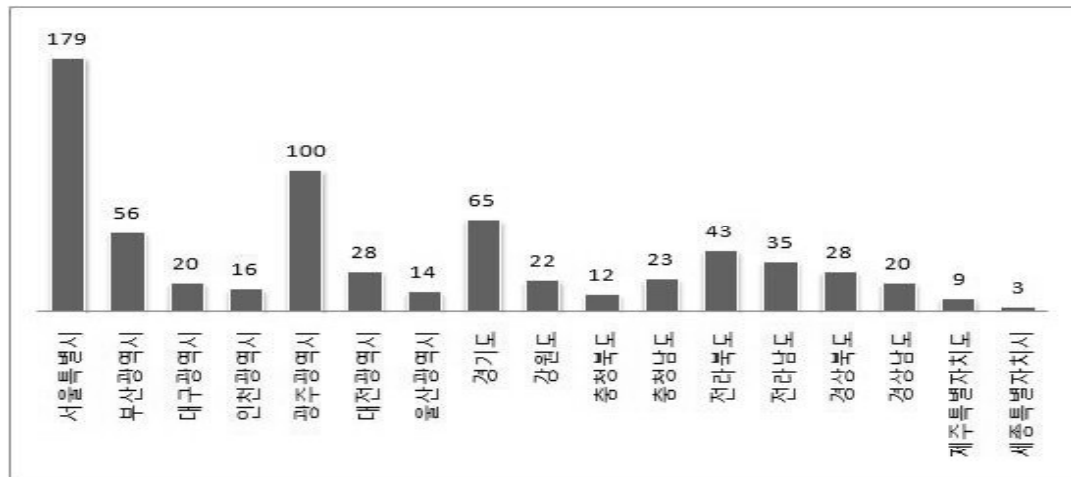
□ 일반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시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일반협동조합의 지역별 신청 및 수리 현황>

연번	소관 지자체	신고건수비고 (2.28일 기준)	신고건수누계 (3.31일 기준)	수리건수누계 (3.31일 기준)	수리율(%)
1	서울특별시	162	233	179	76.8
2	부산광역시	47	57	56	98.2
3	대구광역시	16	21	20	95.2
4	인천광역시	15	26	16	61.5
5	광주광역시	92	109	100	91.7
6	대전광역시	20	32	28	87.5
7	울산광역시	11	15	14	93.3
8	경기도	63	88	65	73.9
9	강원도	21	28	22	78.6
10	충청북도	8	13	12	92.3
11	충청남도	16	26	23	88.5
12	전라북도	33	49	43	87.8
13	전라남도	27	37	35	94.6
14	경상북도	23	28	28	100.0
15	경상남도	11	20	20	100.0
16	제주특별자치도	4	10	9	90.0
17	세종특별자치시	1	3	3	100.0
총 계		570	795	673	84.7

- 협동조합 설립 신청 대비 평균 수리율은 84.7% 이다.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리율이 낮은 지역은 인천, 경기, 서울, 강원도 순이다.(※ 자료 한계로 원인 파악 안됨)

<그림 4.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설립 현황>



(3)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사업연합 성격의 연합회

- 2개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는데, 각각의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다.

<표 6.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회원 협동조합>

연번	연합회 명칭	주요사업	단위 협동조합(협동조합 명칭 생략)
1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	지원지도, 공동구매	부산연구소, 부산여성, 부산사회복지사 부산사회적기업 (4개)
2	한국음식사업 협동조합연합회	식자재 공동구매	행복만나, 행복마을전남, 행복나눔서울, 행복드림인천, 행복희망드림경북, 행복부산갈매기, 행복나눔대전, 행복나눔기울산광역시, 행복마을순천, 행복경남 (10개)

출처: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3) 협동조합의 규모와 출자금 : 10인 이하의 소규모 협동조합이 74% 차지

(1) 총규모 : 9,200여명의 조합원이 134.3억 원 시민자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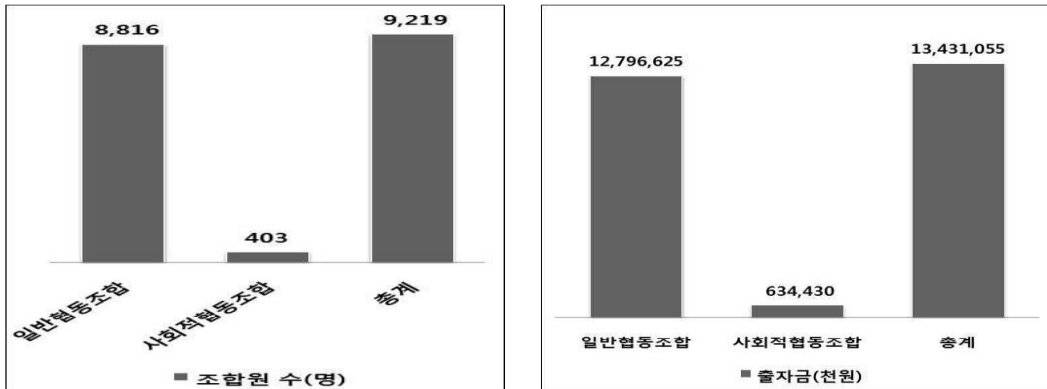
<표 7. 협동조합 조합원 및 출자금 현황>

(1) 일반 협동조합						
	지자체	협동조합수	조합원수	출자금	평균조합원수	평균출자금
1	서울특별시	179	3,446	3,814,449,000	19.3	1,106,921
2	부산광역시	56	673	958,400,000	12.0	1,424,071
3	대구광역시	20	243	234,610,000	12.2	965,473
4	인천광역시	16	327	339,930,000	20.4	1,039,541
5	광주광역시	100	748	423,270,000	7.5	565,869
6	대전광역시	28	313	433,585,000	11.2	1,385,256
7	울산광역시	14	107	503,300,000	7.6	4,703,738
8	경기도	65	783	1,651,381,000	12.0	2,109,043
9	강원도	22	306	562,300,000	13.9	1,837,582
10	충청북도	12	94	249,700,000	7.8	2,656,383
11	충청남도	23	170	234,450,000	7.4	1,379,118
12	전라북도	43	587	1,333,360,000	13.7	2,271,482
13	전라남도	35	385	338,820,000	11.0	880,052
14	경상북도	28	331	1,067,810,000	11.8	3,226,012
15	경상남도	20	175	278,200,000	8.8	1,589,714
16	제주특별자치도	9	113	346,060,000	12.6	3,062,478
17	세종특별자치시	3	15	27,000,000	5.0	1,800,000
소계		673	8,816	12,796,625,000	13.1	1,451,523
(2) 사회적협동조합						
소계		14	403	634,430,000	28.8	1,574,268
협동조합 총계		687	9,219	13,431,055,000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687개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은 9,219명이고 이들에 의해서 조성된 출자금은 약 134억 3,100만에 이른다.

※ 일반협동조합 128억원, 조합원 8,800 명

<그림 5. 조합원과 출자금 현황>



- 일반협동조합의 수는 전체에서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전체의 95.6%, 출자금은 전체의 95.3%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의 수량 비중에 비해 조합원 수와 출자금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떨어진 다 할 수 있다.

※ 평균 조합원 수는 일반협동조합 13.1명, 사회적협동조합 28.8명

1인 평균 출자금은 일반협동조합 145만원, 사회적협동조합 157만원

- 일반협동조합에서 설립이 활성화 되어 있는 서울시와 광주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화 되어 있다 할 수 있고, 반면 광주의 경우 소규모 협동조합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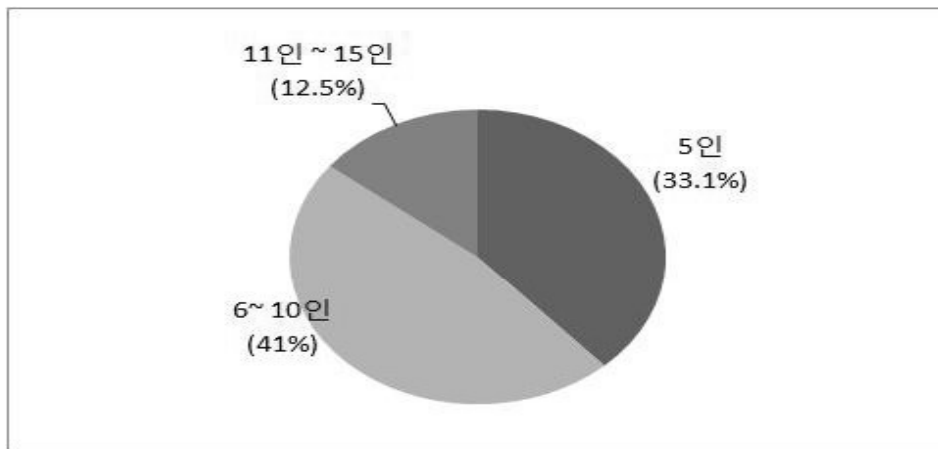
<표 8. 협동조합 활성화 지역의 조합원과 출자금 규모>

	협동조합		조합원		출자금	
	개 수	%	명	%	천원	%
서울시	179	26.6	3,446	39	3,814,450	29.8
광주시	100	14.9	748	8.5	423,270	3.34
전체	673(100)		8,816(100)		12,796,625천원(100)	

(2) 조합원 규모

- 전국적으로 일반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인에서 10인 사이가 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인으로 설립한 협동조합도 33.1%가 된다.
현재까지 설립한 일반협동조합의 74%가 10인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일반협동조합의 조합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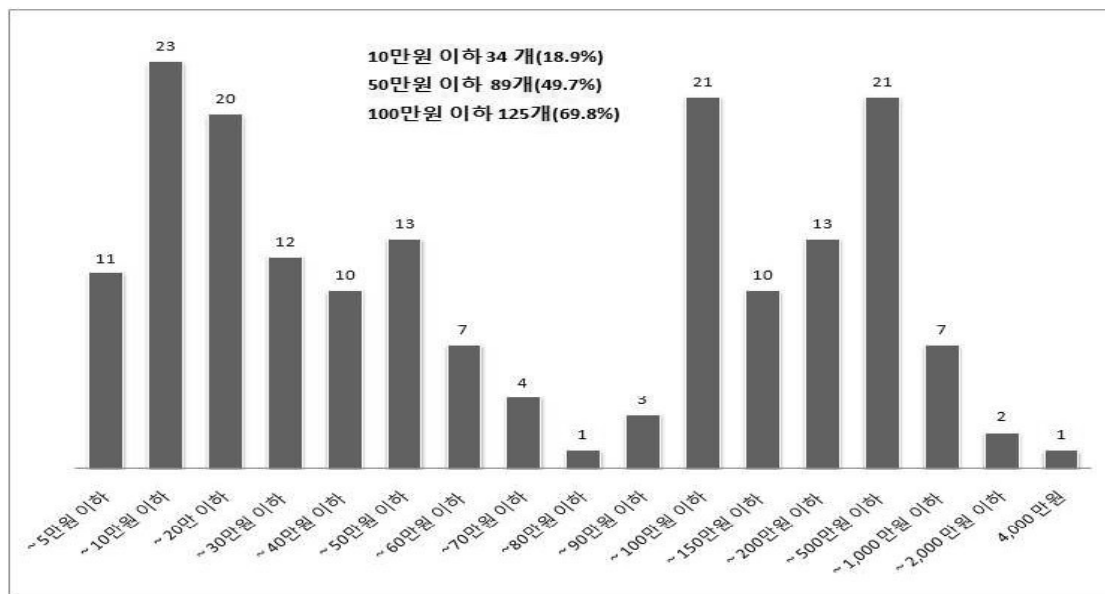
- 지역별로 살펴 볼 때, 조합원 5인 규모의 협동조합 비중이 큰 곳은 충북(58.3%), 광주광역시(46%), 전남(45.7%)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6인에서 10인 사이의 협동조합 비중이 높은 곳은 제주도(66.7%), 경남(60%), 충남(52.2%), 울산, 강원도, 경북은 각 50%를 차지하고 있다.
※ 최대조합원 규모 : 서울시 소재 미디어협동조합(975명, 10억 5,620만원)

(3) 출자금 규모

- 최저출자금의 제한이 없는 관계로 1개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는 5만원에서부터 10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편차도 매우 크다.
※ 일반협동조합 중에서 최대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국민 TV' 설립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협동조합(서울시)으로 10억 5,600만원 조성 (조합원 975명)

- 협동조합이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서울시의 출자금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출자금은 6만원 ~ 10만원 범위내의 출자가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91만원에서 100만원 범위 내의 출자가 이루어진 곳이 21개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단일금액으로는 1인당 평균 출자금이 100만원 인 곳이 20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인당 평균 출자금이 10만원 인 곳이 18개가 된다.
-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1인당 평균 출자금이 50만 원 이하인 곳이 89개소로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출자금이 100만 원 이하인 곳은 125개로 전체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7. 서울시 일반협동조합의 1인당 평균 출자금 분포>



4) 현상에 대한 진단

① 제도 및 정책 환경 요인에 자극받은 협동조합의 양적성장

외부 환경 요인으로 2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5인의 조합원과 최소출자금 규정이 없는 설립 요건이 한 몫하고 있다.

둘째,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다.

서울시, 광주광역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사천시, 순천시, 광명시 등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거나 발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 있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상담센터 설치 등 설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어룡신협과 ‘광산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약’을 가장 먼저 체결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신청과 수리가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절차로 인해 지자체의 적극성과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이 비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주체의 요인 역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식 전환이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매스미디어에 이해서 제공되는 방대한 량의 협동조합 관련 정보를 통해 99%를 위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둘째,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이 유발한 기대 심리의 작용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협동조합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의 정책을 대하고 해석함에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예측하고 기대하는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② 대책이 없는 협동조합의 자원 조달

협동조합 설립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자금의 규모나,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출자금 증액 필요성 등을 감안 할 때, 사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출자금을 어떻게 조달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외부의 차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합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자본조달의 한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사업 성장에 필요

한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은 협동조합 내외부의 지대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주식담보 대출 허용, 우리시주조합의 경우 직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뒤지는 취약한 창업 인프라

협동조합이 발달한 서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못 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의해 각 부분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탓에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설립 상담 및 교육 - 운영 및 사업계획 검토와 조언 - 자금조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과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상담센터는 서울시의 4개, 광주광역시의 7개, 권역별 협동조합지원기관 7개 정도에 불과하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창업 지원과 관련한 역할이 기대가 되나, 당장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협동조합 설립 중에 있는 곳들의 의견과 욕구³⁾

1) 금융권 이용 현황 및 금융권에 대한 기대

※ 조사 : 17개 조직

돌봄(3), 의료생협(8), 주거복지(4), 식품제조 및 외식프랜차이즈 사업(1), 재활용(1)

협동조합 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13), 일반 (3), 미정(1)

(1) 주거채 은행 이용 현황

- ☐ 17개의 조직 중 농협을 주거채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5개소로 의료생협 3 곳, 주거복지사업 조직 2곳 이다. 신협을 주거채 은행으로 이용하는 곳은 1개소가 있었는데, 이 역시 의료생협이다.

11개소의 경우 시중 은행을 주거채 은행으로 하고 있다.

- ☐ 17개 조직 중 신협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3개소로 모두 의료생협이다.

- ☐ 17개 조직 중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8개 조직으로 신용대출 이용 6 개, 담보대출 이용 3개 이다.

- ☐ 협동조합 전환 이후에 농협이나 신협으로 거래은행을 전환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기존 거래은행을 그대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

※ H 社의 의견

* 앞으로 협동조합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봄.

*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속성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다름으로 주식회사에 비해 재무

3) 문보경(201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토론회(3. 29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 김기준 의원실 공동 주최)의 발표문을 재인용하며, 4월 12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분과와 대안기업연합회 산하 노동자협동조합 추진단의 간담회 내용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설립 주체들의 고민을 소개하도록 한다.

제표 및 신용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음.

- * 또한 일반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대표이사 및 대주주에 대한 보증 및 신용을 근거로 금리 및 조건을 판단하는 기존 금융거래의 시스템은 협동조합에 적합하지 않음.
- * 금융권에 협동조합에 맞는 별도의 금융 거래의 기준과 조건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협동조합 금융인 농협이나 신협이 앞장서야 한다고 봄.

- ☐ 농협과 신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를 못 느낀다는 점과 가까운 곳에 없어서, 지점이 많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많았다.

※ H 社 의견

- * 신협은 기업금융이 안되고 제2금융권이므로 이율이 제1금융권에 비해 높음.
- * 일반 상업 은행들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는데 비해 농협으로부터 영업 제안을 받은 적이 없음.
-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금융거래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함.

※ H 의료생협 의견

- * 농협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없음.
- *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라는 인식도 없음.
- * 8년을 이용했어도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 법인 카드 갱신 시에도 인적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2) 협동조합 전환을 앞두고 이루어진 금융 상담

- ☐ 17개 조직 중 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금융관련 사항에 대해 거래 은행에 문의를 해 본 곳은 3개 이며, 4곳은 계획을 갖고 있다.
- ☐ 금융기관에 문의를 했거나 문의를 해보고 싶은 내용은 기존 금융서비스 이용의 승계나, 대출 연장, 신규 대출에 관한 사항이었다.

- ☐ 그리고 이들 대부분 거래 은행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경우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 H사의 문의 내용과 결과

- ☐ 문의 :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전환 시 대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은 없는가?
- ☐ 답변 : 현재 협동조합 기업 대출에 대한 본점의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잘 모름.
과거의 사례(생산자협동조합 등)의 경우는 은행 대출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음
우선 주식회사의 대주주처럼 분명한 대출에 대한 책임이나 보증의 대상이 없음
으로 인해 대출을 기피함.
관련 서류 접수 시 모든 조합원들의 서류가 필요함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움.
재무제표의 평가나 신용평가에 있어서 협동조합 기업에 불리하다는 내부 규정은
없으나 실제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일반 주식회사에 비해 높음.
- ☐ 의견 : 일반 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으나, 현 주거
래 은행인 기업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사규를 개정해 일반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했다는 답변을 들음. 다른 은행의 상황은 확인 안됨.
협동조합 진영 내의 내부자금 마련이나 농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 금융권이 협
동조합 기업에게 유리한 대출 기준이나 거래 기준을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봄.

※ N 돌봄센터 문의 내용과 결과

- ☐ 문의 : 전환 후 퇴직적립금 및 기존 거래 계좌의 승계 문제
- ☐ 답변 : 양도양수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함.

※ N.P 돌봄센터 문의 내용과 결과

- ☐ 문의 : 금융거래 업무 변경 건
- ☐ 답변 : 법인 취득 후 논의하자 함.

※ 기타

- ☐ K 돌봄 : 임대료 대출 건 문의 예정
- ☐ K 의료생협 : 대출자격 문의 예정
- ☐ M 의료생협 : 신용대출 연장 여부 문의 예정
- ☐ C 社 :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대표이사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 금융
거래 관계에 장애요인은 없는지 문의 예정

(3) 은행에 대한 기대

□ 현재 은행 거래의 대부분은 입출금 통장 및 급여이체 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다.

□ 응답자들이 거래은행에 거는 기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 | | | |
|----------------------------|-------------------|-----------|---------------|
| • 예금과 적금(6) | • 소액대출(1) | • 금융상담(5) | • 단체퇴직금 적립(7) |
| • 사업비 대출(9) | • 사업비 외 운영비 대출(7) | • 사업투자(4) | |
| • 기타 사항 - 수수료 면제, 업무 효율화 등 | | | |

응답 결과를 보면 대출에 대한 필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체퇴직금 적립 및 금융 상담에 대한 욕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4) 협동조합 단계에 따른 필요한 금융 지원 사항

□ 현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 금융 지원 사항에 대해 응답을 한 곳은 10개 조직인데, 주로 공간 임대를 위한 자금 조달을 비롯해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비 대출, 부채 승계 등에 대한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자금관리서비스, 계좌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같이 제시하였다.

□ 협동조합 단계 별 필요 금융 지원 사항

- 준비단계 -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
- 설립단계 - 조합원 출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대출

※ 인당 출자금 규모는 적게는 3만원, 최고 금액은 1천만원.

응답자의 3개소를 제외하고 출자금의 규모가 사업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고, 향후 특정 시기를 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출자금 증액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운영단계 -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증가하는 자금지원이 필요, 사업 확장 및 설비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필요.
업무 서류의 간소화,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필요.

2)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주체들의 당면 과제

<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 >

쟁점사항		제안
주제	내용	
전환에 따른 증여	협동조합 전환 시 기업 가치 재평가와 조합원 출자액과의 차액 발생에 따른 증여세 부담	가치평가 변동, 처분불가 등을 고려 증여세 감면
미처분 잉여금 처분기준	법적적립금, 임의적립금 이외 잉여금, 투자자산등에 대한 소유 및 분할 기준 검토	분배불가적립금 기준제시
신규조합원 무임승차	무임승차 방지 위한 기업가치 상승분 출자금 반영, 높은 출자금에 따른 신규조합원 가입 불가, 사업확장 장애발생	출자액에 따른 잔여재산 소유권 기준제시
집단 이익 위한 협동조합 청산	공익성, 협동조합 내 영업권 양도 등 잔여재산 처분관련 내용 검토	노동기여, 출자액 기준 잔여재산 분배 무형가치 이외 유동자산만 처분허용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활용배제, 벤처기업 인증불확실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위 명확화
전환조치_동일법인 간주 지침효력	금융관련 정부출연기관 동일법인 미간주, 신규대출 요구(비공식)	기재부 질의, 명확한 공식적 지침 하달
자금조달, 사업활성화 위한 분할, 합병, 자회사설립	사업확장, 자금조달 측면, 협동조합 분할 통한 주식회사 자회사 설립 가능성 검토. 다양한 협동조합 고려, 1인1표, 민주적 원칙 충족시 모든 것 영위하도록 기본법 개정방향 검토	협동조합기본법 목적에 따른 개정방향 모색

(1) 협동조합 전환 상에서 발생하는 혼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운영할 경우 당면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① 협동조합 전환 시 동일 법인 간주 효과의 현실 구속력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출 승계만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 및 기존에 누렸던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법 시행 초기인 상황 탓인지 동일 법인 간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업에 누렸던 권리의 축소나 기회 배제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기관 뿐만 아니라 공기관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인·허가 승계, 대출 신용도 변경, 대출 승계 불투명 등)

② 사업의 성장과 확장에 있어서 제약 요인 우려

간담회 참석한 협동조합 전환 준비 기업들은 현재의 업력이 최소 5년에서 15년 이상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태도 좋은 곳들이다.

이들의 고민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의 위축 요소와 사업 확장 장애요인에 모아져 있다. 금융권 이용은 차지고, 신규 사업의 모색과 다양한 사업 주체들과의 사업 연합 등이 자유로와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합병 및 분할 금지 조항을 통해 추정되는 ‘협동조합의 주식회사 자회사 설립 금지’에 대한 우려이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조기반의 사업체들은 설비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의존해서 조달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은행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자금조달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협동조합이 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는 아이쿱 생협의 (주)icoop스토아의 자연드림,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인 (주)도드람푸드 등이 대표적이다.

③ 주식회사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금지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총회 결의를 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③항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이하여 이미 설립 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이하 생략)'이라는 조항에 근거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설립을 준비해 인가신청을 해 놓은 주식회사나 전환 총회 후 인가신청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현재 관련 행정기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2) 기업체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 적용 배제 우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통의 목적을 거래를 통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사체로서의 성격과 사업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사업체의 성격으로부터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이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겪는 문제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으며, 협동조합이 출현하는 초기라는 현 단계는 일반기업보다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규모를 갖추고 있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육성정책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① 중소기업 지위 명시 필요

② 기존 협동조합에 준하는 9 % 법인세율 부과

③ 협동조합 출자 배당에 대한 배당세 감면

※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종업원지주제도인 우리사주조합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우리사주조합에대한 세제 혜택은 자사주 취득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식 배당에 대한 비과세 등이 있다.

④ 협동조합 전환 시, 기존 대주주 지분의 조합원 무상 양도시 증여세 면제 등

(3) 협동조합의 청산 가치 보다 지속가치가 더 높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협동조합이 발전 해 오는 과정에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해 제기되었던 비판 중 하나가, 기업의 지속적 유지 보다는 일정 성장 이후 청산해 청산 이득을 취하는 노동자 조합원의 근시안적 태도에 대한 것이었다.

- 이 문제 역시 협동조합 주체들이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로, 청산 이익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에 의한 잘못된 결정을 제어 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분배불가 적립금’을 통한 ‘청산 이익의 취득 제한’이 그것으로 협동조합의 현금 보유력을 높이고, 사업의 확대와 지속성을 통해 잠재조합원 다수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이슈는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목적 및 이윤분배 제약에 관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비영리적 성격을 뒷받침 하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협동조합이 자본 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하지 않는 점과 출자에 대한 비중 보다는 운영에의 참여와 노동 및 이용 기여에 따른 이용고 배당이라는 성격에 근거해 종래의 영리기업의 설립 목적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지점이다.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자치와 자율을 강화하는 관점의 정책

-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결사체와 기업의 성격 두 가지 모두를 겸비하고 있다. 그렇기에 협동조합 운영이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열쇠이다.

- 정책 입안의 관점은 협동조합이 자치와 자율에 입각해 자기성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물량 공세 보다는 협동조합 스스로가 자금을 조성하고,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통해 사업 연대를 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애 요인을 완화시키고, 제도적 근거를 부여해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

<필요 정책>

- 공무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 강화 및 정례화
- 정부출연 기관에서 협동조합과의 사업 협력 및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 자치단체에 속한 협동조합 현황 정보 제공

2) 시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브릿지' 정책

-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8개 협동조합 개별법에 의해 설립한 협동조합과의 협동을 통해 사업 협동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농협은행과 신한, 새마을금고 등이 협동조합 금융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촉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심으로 전대되는 공제사업이나, 사업자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규협동조합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 또한 필요하다.
- 협동조합은 법인격임과 동시에 사회 문제에 당면한 당사자들의 자기해결 방식이라는 점에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 할 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시장 지원 정책을 협동조합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정책>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회적 기금의 공유 조치
- 농협 및 1금융권에 협동조합 전담 창구 개설 유도
- 중소기업 정책에 협동조합을 포함
-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 배제(협동조합 전환 시 신용평가 등급 유지 등)

3) 협동조합의 결사체적 성격과 사업체 성격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 협동조합기본법은 법리적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결사체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사업체로서의 성장과 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들의 필요와 이해를 반영한 법률 개정 이슈를 제기한다.(※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범주	취지	법률 개정 이슈
1. 설립 및 운영 간소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에 대해 운영상의 예외(대의원회 설치)를 부여한 것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며, 다른 종류의 법인에 준한 간소화	①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 보장 ② 공증절차 간소화 : 사회적협동조합 및 출자금 총액 30억 미만인 일반협동조합은 의사록 및 정관에 대한 공증 절차 생략.
2. 협동조합의 영향력 확대	기존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으로부터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 유지	③ 중소기업의 지위 부여 ④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정비 : 법인세, 증여세, 배당세, 취득세 등
	기존 사업자의 협동조합 전환이 사업안정화 등에 있어 더욱 효과적임	⑤ 협동조합으로의 상시 전환 허용 ⑥ 전환 절차 및 동일법인 간주효과 현실화
	협동조합간의 협력 및 일반기업과 협동조합간의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 유도.	⑦ 협동조합기본법 외의 법률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피흡수합병 허용 ⑧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한 협동조합과의 사업 협력 보장
	협동조합연합회의의 기능을 확장하고 권한을 강화해 단의 협동조합의 성장과 사업안정 모색	⑨ 자금조성 및 공제사업 허용 ⑩ 회원사에 대한 관리·감독권 권한 부여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반영한 조치 필요	⑪ 원외 이용금지 조항 폐지 ⑫ 비조합원 이해 보장 및 경영참여
	자조적인 서민금융 및 공제 활동 보장	⑬ 신용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설립 보장
4. 정체성 강화	영리 기업과 차별되는 협동조합의 비영리적 특성을 반영.	⑭ 분배불가적립금 조성 (법인세 과세 면제, 연합회로 이월) ⑮ 청산자산이익의 취득 제약